

노동자권리찾기 상담전화

부평공단	032-525-0497	광주	062-453-4012
남동공단	070-4756-0119	전남서남	061-462-7177
경기	031-251-7095	대구 성서공단	053-585-6200
안산/시흥	031-491-7097	포항	064-278-1339
서울	02-2636-2148	녹산공단	051-941-8211
서울 구로/금천/관악/동작	02-867-2260	창원공단	0899-2090
의정부/양주/파주	031-866-8489	부산/양산	051-637-7433
		정관공단(동부산)	051-727-8977

해지樂

바꿀 건 바꾸고! 지킬 건 지키고! 즐겁게 살자!

2016년 11월호

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02-2670-9509

- 2면 인천 주안공단 화학물질 실태조사
- 3면 지역활동 사례 / 노조파괴 산재 인정
- 4면 신규사업장 사례소개 / 우영산업 광주지회
- 5면 이곳에 노동조합이 있다 /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정신보건지부

- 6면 이주노동칼럼 / 깃잎 좋아하세요?
- 7면 노동안전칼럼 / 지진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8면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노동자 대행진

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의 진실

국민 상대 돈벌이, 쉬운 해고 내몰리는 노동자...공공부문 다음 민간부문 표적



일하는 사람들, 시민들이 공공부문 성과연봉(퇴출)제 도입을 모르는 체 하면 그 다음 표적은 민간부문이다. 쉬운 해고제 도입으로 대량해고가 시작 될 것이 분명하다. 10월19일 서울 대학로에서 연 '노동계약 폐기, 성과·퇴출제 분쇄, 부패·불법·살인정권 퇴진, 공공-화물연대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 승리를 결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하철·철도노동조합이 지난 9월27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한 총파업을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공공기관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다. 공공부문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제'로 바꾸자는 것. 정부는 연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2017년 총인건비를 동결하고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협박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 파업을 벌일까.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공공서비스 향상과 예산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공공부문의 '성과'는 누가, 무엇으로 측정할까. 병원에서 환자를 많이 살리는 진료가 성과일까, 돈을 많이 벌어서 병원에 이익을 더 내는 진료가 성과일까. 철도공사는 적은 비용으로 고수익을 내는 운영이 성과일까, 국민의 안전한 발이 되는 운영이 성과일까. 공공기관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기에 성과 평가 기준에 개인별 업무평가 기준이 없다. 그러나 성과주의를 도입하면 사용자나 상급자의 일방 평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병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 수익을 많이 낸 의사에게 성과금을 준다면 의사는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과잉진료를 일삼으

며 돈이 되는 환자만 골라 치료할 것이다.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성과주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철도공사는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비용이 싸 보이는 외주화 비율을 높일 것이다. 수서발 KTX 분할 매각, 적자 노선 매각 등 민영화 수순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민간, 외주기업이 국민의 발을 자처하기보다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창출하려 할 때 국민의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돈을 좇으면 동료 사이, 공공기관 사이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경쟁이 깊어지고 공공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국민은 돈만 뺏기는 꼴이 된다.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 성과를 내지 못하는 핑계, 돈벌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책임을 뒤집어쓰고 해고될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 시민들이 공공부문 성과연봉(퇴출)제 도입을 모르는 체 하면 그 다음 표적은 민간부문이다. 쉬운 해고제 도입으로 대량해고가 시작 될 것이 분명하다.

공공의 이익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쉬운 해고로 내모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기 위해 지하철, 병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고 철도노조 노동자들이 11월8일로 43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역,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많은 노동자들이 이 싸움을 지지하고 함께 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는 회사가 아니다.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버는지는 결코 성과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의 진실을 보아야 한다. 돈벌이 경쟁을 강요하는 성과주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잡는 성과주의를 지켜 볼 수 없다.



철도노조 노동자들이 11월8일로 43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역,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많은 노동자들이 이 싸움을 지지하고 함께 하고 있다.

“공장에서 화학물질 안 쓰세요?” “네? 몰라요...”

인천 주안공단 화학물질 실태조사...사업주 ‘안전보건 조치 의무’ 이행해야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이 주안공단에서 화학물질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대상 노동자들의 사업장은 화학물질 안전보건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한 정보 제공, 경고표지를 통한 주의 환기,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노출 측정, 특수건강진단을 통한 직업병 조기 발견 등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업환경측정을 통한 노출 측정, 특수건강진단을 통한 직업병 조기 발견 등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한다는 사업장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장은 노동조합이 있는 유일한 사업장이었다.

화학물질 취급 시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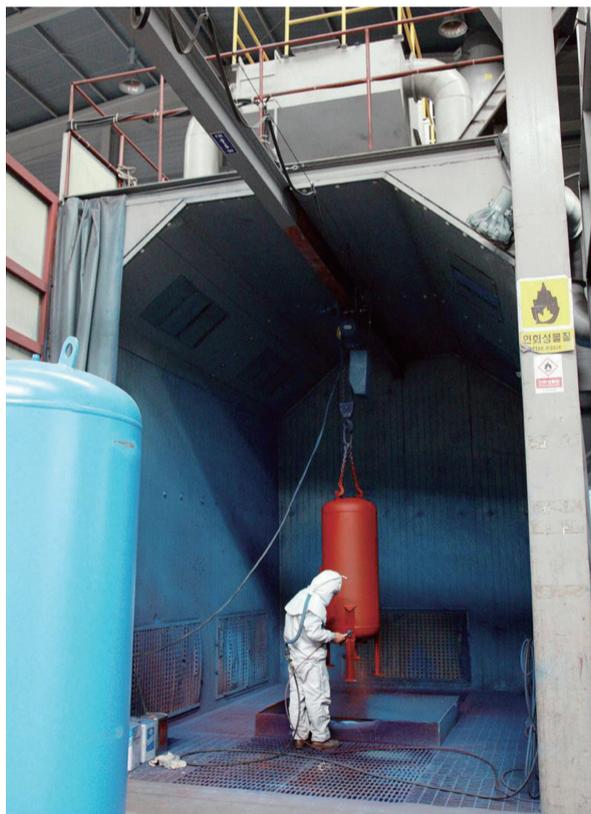
- 알 권리 보장 :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및 비치, 경고표지
- 참여할 권리 보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작업환경측정 등 노동자 참여
- 노출정도 측정 : 작업환경측정(1년 2회)
- 직업병 조기 발견 : 특수건강진단(1년 1회 이상)
- 사고 대비 : 위험 발견 시 작업 중지하고 위험요인 제거 후 작업 재개
- 노출 예방 조치 : 안전한 물질로 대체, 설비 밀폐, 국소배기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

34곳 업체 121명 참여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주안공단에서 9월21일부터 10월5일까지 2주 동안 11차례에 걸쳐 ‘화학물질 실태조사’를 벌였다. 34곳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121명이 참여했다. 40세 이상 노동자 비율이 약 80%이며, 근속년수 1년 이상 노동자가 80%였다. 숙련도와 경험이 있는 노동자가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50인 이하 업체가 65%였다.

10명 중 9명 ‘화학물질 취급, 노출’ ‘쓰고 있지만, 무슨 물질인지 몰라요’

121명 중 105명이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이상 화학물질에 노출된 노동자가 53%에 달했다. 주로 부품 세척과 설비 세척에 쓰는 세척제, 절삭유 등 금속가공유, 금속 부식방지용 방청제와 부패 방지용 방부제 순으로 많이 노출돼 있었다. 도장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도료와 경화제(신너), 코팅제 등에 노출되고 있었다. 국제암연구소는 도장 작업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10명 중 9명의 노동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었지만 해당 화학물질의 이름을 아는 노동자는 10%에 불과했다.



도장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도료와 경화제(신너), 코팅제 등에 노출되고 있었다. 국제암연구소는 도장 작업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한 노동자가 도장 작업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업주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노동조합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 의무 이행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이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우고 있다.

조사 대상 노동자들의 사업장은 화학물질 안전보건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한 정보 제공, 경고표지를 통한 주의 환기, 작

노동조합 만들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면, 사업단에 제보하자

최근 드러난 메탄올로 인한 파견노동자 실명 산업재해에서 보듯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노동자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데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단돈 350만원에 합의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피해는 노동자들의 몸에 쌓이고 있다. 언제 노동자들의 몸에서 암으로 나타날지 모른다. 개인인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요구할 수 없는 현실에서, 대안은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 당장 노동조합 만들기 어렵고 화학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제발, 〈바지락〉 1면에 있는 각 지역 권리 찾기 사업단에 제보해 주기 바란다.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꿈꾸는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회원들이 지난 5월28일 의정부에서 창립보고대회를 열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보수 성향이 강하고 진보 노동운동의 역량이 그리 높은 지역이 아닙니다.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파주까지 대다수가 중소기업 사업장들이고 파주 LG LCD단지 정도가 규모 있는 사업장입니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최저시급에 준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노동, 정당, 협동조합, 시민단체들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을 만들어 보자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를 세웠습니다. 5월28일 창립대회를 열고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경기북부지역지회 상근자, 조합원들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 의정부 용현공단, 파주 LCD일반산업단지 선전을 벌이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엽니다. 비정규 노동, 장시간 노동, 저임금, 여성노동자 차별, 청소년 노동인권 무시 등 노동문제를 지역에서 바꾸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는 미래 노동자인 청소년의 노동인권 감

수성을 키우기 위해 ‘청소년노동인권강사단’ 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중-고등학교에 알리기 위한 기초사업의 하나로 경기도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크>와 함께 강사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는 파주, 문산 산업단지에서 천원영화제, 노동인권 중심 인문학강좌, 선전홍보사업 등 공단노동자와 만나는 다양한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반기에 천원영화제 열어 일상에서 지역노동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노동과 진보의 가치가 존중받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품을 넓히고 힘을 모아 천천히 가더라도 끈질기게 달려 갈 것입니다. 정영미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회원

노동자는 ‘노조 할 권리’가 있다

‘노조파괴’ 공작 시달린 유성기업 노동자, 업무상 재해 인정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유성기업 영동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한광호는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성기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권과 이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악랄한 행태를 저지른 기업으로 유명하다. 창조건설팅이라는 노무법인과 손을 잡고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무력화의 배후에 현대차가 있었다는 사실도 이들이 만든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직장을 불법으로 폐쇄하거나 제2노조를 설립하는 등 회사 측의 공작에 맞서, 노조탄압을 방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노동부에 맞서 한광호 열사는 지난 2011년부터 동료들과 함께 민주노조를 지키기는 싸움을 이어갔다. 이 싸움의 과정에서 두 차례 징계를 당했다. 유성기업은 올해 3월 한광호 열사를 또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사실조사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결국 열사는 노조파괴 공작에 고통 받다 지난 3월17일 생을 달리했다. 그로부터 216일이 10월18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서울질판위)가 한광호 열사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1항 2호의 ‘업무상 재해’로 최종 판정했다. 서울질판위는 “(한광호 열사가) 수년간 노조 활동과 관련한 갈등으로 인해 우울증 상태에 있었고, 사건 발생 1주 전 사실조사 출석요구서가 정신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27일 포스코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한 양우권 열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이은 의미 있는 판정이다. 양우권 열사 역시 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대기발령, 해고와 정직 등 회사의 괴롭힘이 있었다. 서울질판위는 “해고와 복직이 반복되는 과정, 복직 후 이어진 이지테크의 법정대응 및 징계처분

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한 우울증이 발생”했다며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됐다”는 소견과 함께 업무상 재해로 최종 판정했다.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와 해고를 받을 이유는 없으며, 이로 인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는 업무상 재해라는 의미에 힘이 실린다. 노동자는 법이 보장한 ‘노조 할 권리’가 있다.

■ 정정 보도

〈바지樂〉 9월호 3면, ‘인력파견업체의 일용직, 일당직은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 기사 내용을 정정합니다. ‘5인 이상의 상시노동자를 고용한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 하더라도 7일 이상 계속 일할 경우 주휴일에 쉴 수 있고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5인 이상의 상시노동자를 고용한 업체’라고 명기했으나 ‘유급주휴일은 상시 노동자수가 5인 미만이라도 하더라도 적용’되므로 이를 정정합니다.

“노동조합,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인터뷰] 최근호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우영산업 광주지회장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우영산업 광주지회가 지난 7월1일 창립총회를 열고 있다.

바지락 우영산업 광주지회 노동조합 소개 해주세요.

최근호 지회장 우영산업 광주지회는 올해 7월에 만들었습니다. 49명의 조합원이 뽕뽕 뭉쳐 한 식구를 이루고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본사가 천안에 있습니다. 생산공장은 경주와 광주 두 곳에 있는 자동차 차체부품 제조사업장입니다. 경주공장에 있는 우영산업 경주지회가 우리보다 조금 먼저 생겨 형제 노동조합이 있는 셈이고요. 광주공장에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노동자 다 포함해서 전체 105명이 복닥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지락 지회 결성 계기와 과정을 소개해 주세요.

최근호 지회장 저는 입사한지 만 10년 되었습니다. 영업직으로 입사해서 3년, 생산직으로 옮겨 6년, 부품 쪽으로 1~2년여 근속하다가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10년 근속하다보니 힘든 노동강도보다 나이불문 인간적인 모멸감 주는 관리자, 노동자 의견수렴 전혀 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회사 태도, 편파 인사발령, 선별 임금인상 등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목숨 줄을 쥐고 있는 회사가 특하면 “일하기 싫으면 관둬라”라고 하니, 먹고 살려고 참으면서 일하는데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변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경주공장에서 먼저 금속노조에 가입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꾸준히 소식을 접하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광주전남지부가 함께 첫 만남을 했고, 작은 호기심과 그동안 억눌렀던 현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노조 결성의 조건이 되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많았지만 동료들도 비슷한 마음이었기에 기왕 모였으니, 뭔가 ‘시작’해보자는 심정으로 준비했습니다.

바지락 노동조합 결성 이후 눈에 띄게 현장에서 바뀐 점이 있는지요.

최근호 지회장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우영산업이 이미 경주에서 한 번 경험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면에서 지회 요구를 수용하더군요.

요. 노동조건이 자유로워지고 임금-단체협약을 나름 성과 있게 마무리해서 임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30~40만원 정도. 사업장에 한국노총 노조가 있어 매해 임금인상이 있었지만 어떤 과정으로 인상분을 결정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지회가 이번에 새롭게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설명회를 하고 찬반투표를 하는 등 민주적인 과정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압도적 찬성표로 임단협 합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모욕을 주던 관리자들의 태도가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노동조합을 무시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반말하고 막대하던 태도도 많이 없어졌고요.

또 여성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건강검진, 여성들을 위한 복지향상, 휴가사용, 무급휴직도 유급으로 일부 전환했습니다. 이렇게만 해나가면 살맛나는 현장을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이 듭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우영산업 광주지회 조합원들이 공장 정문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바지락 아직 노동조합을 접해보지 못했거나,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 우영산업과 같은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공단의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최근호 지회장 대다수 공단 노동자들은 점심시간에 잠깐 외출하고 출퇴근하기 바쁘니 공단에 사업장이 아무리 많아도 얼마나 공단이 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노조활동을 시작하고 집회에 갔는데 서로 모르는 사이여도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서로 극진하게 인사를 나누고 굉장한 편한 느낌이었습니다. 조합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감 가고 한식구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왜 이제야 노동조합을 알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아쉬움이 무척 큼니다. 더 빨리 접하고 알았다면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은 걸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단 도전하고 행동하고 내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회사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무엇이든 된다고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 노조가 자리를 잘 잡고 열심히 활동을 해서 공단 노동자들에게 희망으로 다가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 만들어 진짜 사장을 찾았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정신보건지부...“고용안정이 주민의 정신건강 지킨다”



서울시와 맺은 협약의 성과에 이어 각 자치구도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라며 10월5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10월26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철야노숙농성과 단식까지 벌이고 있다. 투쟁이 하나씩 결실을 만들고 있다. 11월1일 동작, 성동, 성북, 종로구와 고용안정협약을 맺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정신보건지부 조합원들.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다.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각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일하며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일을 한다. 시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센터. 고용이 안정된 전문직이라 생각할만한데 이들은 왜 노동조합을 만들었을까. “조합원 모두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자격증 중 하나를 갖고 있다.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까지 있어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일할 수 있다.” 김성우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정신보건지부장의 말이다. 그러나 이들의 고용은 서울시나 자치구도 안전하게 보장해 주지 않는다. 대부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어 1년마다 재계약하거나, 10개월씩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을 이어간다. 누구도 고용승계 의무를 지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원 중 정규직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김성우 지부장은 “지역사회에서 자살, 우울증,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상담, 교육 관리해 지역사회에서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평균 재직 연수가 2.7년으로 짧다보니 업무의 숙련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상담자가 계속 바뀌지 않아야 안정적으로 상담하고 제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의 고용을 지키는 투쟁이 주민들의 정신 장애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에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시도 자치구도 위탁업을 수행하고 있는 센터장도 자신들은 진짜 사장이 아니라고 했다. 이 노동자들은 지난 2월 노조를 설립했고 5월부터 서울시와 고용안정협약을 요구하며 교섭을 요청하고 투쟁했다. 결국 서울시는 지난 9월 고용안정협약에 서명했다. “서울시에서 일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 315명 중 290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서울시 직영 2개 센터, 지역 25개 센터 등 모두 27개 센터가 있다. 24개 센터 노동자들이 조합에 가입했다.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아슬아슬 이어가고 있는 고용관계, 임금삭감에 분노했던 울분이 하나씩 터져 나왔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찾아 가입했다.” 김성우 지부장이 말했다. 조합원들과 퐁퐁 뭉쳐 요구한 결과 교섭에 응하지 않고 대화할 의지가 없던 서울시를 교섭

자리에 나오게 했다.

서울시와 맺은 협약의 성과에 이어 각 자치구도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라며 10월5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10월26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철야노숙농성과 단식까지 벌이고 있다. 투쟁이 하나씩 결실을 만들고 있다. 11월1일 동작, 성동, 성북, 종로구와 고용안정협약을 맺었다. 나머지 18개의 미합의 자치구에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라는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직접 자치구를 찾아가는 버스투어 캠페인을 시작했다. 한 달이 훌쩍 넘는 파업. 조합원들은 끄떡없다. 김성우 지부장은 “노동자가 권리를 찾아가는 감동,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내 일의 가치를, 어려움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조합원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조합원들의 애사심과 일에 대한 자부심이 정신 상담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정신보건지부는 10월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나와라 진짜 사장, 멈춰라 외주화, 끝내자 하청인생, 간접고용-하청비



한 달이 훌쩍 넘는 파업. 조합원들은 끄떡없다. 김성우 지부장은 “노동자가 권리를 찾아가는 감동,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내 일의 가치를, 어려움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조합원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조합원들의 애사심과 일에 대한 자부심이 정신 상담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규직 노동자 공동투쟁 선포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전국의 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이 정신보건지부 조합원들의 투쟁을 응원했다.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공공부문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벌이는 파업에 대해 스스로 죄책감이 들 때도 있었지만, 고생한다고, 꼭 싸워서 이기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 덕에 큰 힘을 낼 수 있었다고 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싸우면서 우리의 진짜 사장을 찾았다. 집단성, 대표성이 있는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면 노동자 스스로가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말하는 김성우 지부장. 노동조합 가입을 고민하는 노동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나의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자. 같은 고민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다. 열심히 일한 만큼, 억울하게 일한만큼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데 더 열정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전국에 있지만 노동조합은 아직 서울시에만 있다. 전국에서 일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 지켜보고 있기에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정신보건지부 조합원들은 오늘도 더 크고 당당한 목소리로 승리하기 위해 외친다. “정신보건 고용안정투쟁.”

껏잎 좋아하세요?

밀양 껏잎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이야기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30분에서 11시간 동안 일했다. 정말 뜨거웠던 올해 여름 비닐하우스에서 땀을 줄줄 흘렸다. (자료사진)

모락모락 김 오르는 쌀밥에 걸쳐 먹으면 제 맛인 껏잎김치, 지글지글 삼겹살에 쌈장 찍고 마늘 얹어 싸 먹으면 최고인 껏잎, 막걸리 안주로 제격인 껏잎 튀김까지. 입안에 군침 돌게 하는 껏잎은 한국사람 밥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채소 중 하나다.

최근 껏잎 먹기 불편한 마음이 생긴 사건이 벌어졌다. 밀양의 껏잎 농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여성들이 농장주가 월급 제대로 주지 않아서 다른 일자리를 찾고 싶다는 상담하러 왔다.

새삼 누군가의 노동으로 농산물이 우리 손에, 입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생각했다. 밀양 껏잎이 입속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한 노동자는 100만원만 받았다.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이는 123만원을 받았다. 월급이 차이나는 이유는 숙박비였다. 컨테이너 박스에서 사는데 한 달에 23만원이나 났다. 1년 이상 일한 이들이 '제대로' 계산했을 때 받아야 할 임금은 600만원이 넘었다. 계약서에 휴게시간이 3시간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노동자들은 점심시간 한 시간만 쉬었을 뿐이다.

노동부에 진정을 내고 출석일에 동행했다. 어떤 표독스런 농장주가 나올까 생각했지만 그저 내 아버지 같은 굵은 주름과 그을린 얼굴의 농사꾼이었다. 이 농장주는 걱정이 되었는지 젊은 사위와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몇 번 당해봤다'는 이웃을 대동했다.

우리는 실제 근로시간은 계약서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정리해 둔 근무시간 기록을 제출했다. 농장주에게 근무시간 기록 같은 건 없었다. 한국어와 캄보디아어로 쓰인 서류 한 장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에 내가 같이 갔던 캄보디아노동자의 사인이 딱 하나 있었다. 본인 것이 맞다고 했다.

서류 이름은 근로확인서. 여러 말들이 쓰여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주가 가리킨 것은 '농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한다'는 문구였다. 휴게시간으로 점심시간 한 시간밖에 못썼다는 노동자에게 농장주는 "왜 자유롭게 쉬지 않고 그 시간에 일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황당해 하는 노동자는 "당신이 쉬지 말고 일 하라고

했잖아"라고 통역자를 통해 전했다.

근로확인서에 서명한 경위를 들어보니 한국에 처음 입국하여 경기도에서 2박3일 숙박 교육을 받고 밀양으로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어떤 한국 여성이 서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른 노동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사할 때 서명했다 했다.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겨를도 없었고 일을 시작하기 전이니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모두 서명했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제약하기 위해 이러한 꼼수를 썼던 버스 안의 '그 여성'과 업무대행을 돈 주고 맡겼던 농장주를 진지하게 조사하고 문제를 파헤쳐야 할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캄보디아어로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을 몰랐느냐, 왜 서명을 했느냐"며 노동자를 압박했다. 더 화나는 일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장처럼 이주노동자들을 "애들, 애들" 이라고 불렀다. 여러 번 항의했지만 자기가 부르는 게 아니라 알아듣기 쉽게 사업주가 하는 말로 지칭할 뿐이라고 했다. 대체 무슨 개뻐다귀 같은 소리인가. 노동자가 알아듣기 쉽고 존중하는 호칭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제약하기 위해 이러한 꼼수를 썼던 버스 안의 '그 여성'과 업무대행을 돈 주고 맡겼던 농장주를 진지하게 조사하고 문제를 파헤쳐야 할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캄보디아어로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을 몰랐느냐, 왜 서명을 했느냐"며 노동자를 압박했다. 더 화나는 일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장처럼 이주노동자들을 "애들, 애들" 이라고 불렀다. (자료사진)

을 쓰면 된다.

한국에서 소비하는 껏잎 70%가 밀양에서 난다고 한다. 밀양에서 일하는 2천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한다는 근로확인서에 서명하고도 한 시간만 쉬고 11시간 동안 뼈 빠지게 일하는 부자유스런 삶을 살고 있다. 첫 상담 건이 채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상담이 밀양으로부터 밀려오고 있다. '밀양 송전탑 투쟁했던 할머니들께 연락해볼까? 밀양 농민회에 도움을 청해볼까? 노동부를 압박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민이다. 나처럼 껏잎 좋아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주면 어떨까?

지진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노동자 보호는 정부와 사업주의 의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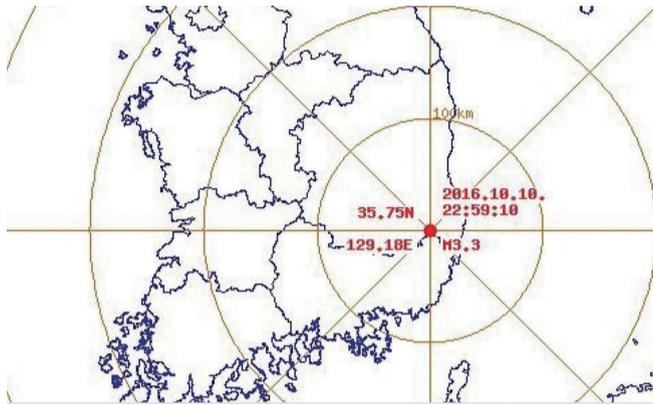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용접작업하다 지진을 경험할 수 있다. 용광로에서 슬래그 제거작업하다 지진을 맞을 수 있다. 크레인 운전하다, 지게차 운전하다가 지진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화학물질을 주입-운반하다, 선반 위에 물건을 올려놓다가, 중량물을 옮기다 지진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지게차 옆을 지나다, 사다리 작업을 하다가 지진 때문에 다칠 수 있다. 노동자 여러분은 지진 온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원전과 석유화학단지 등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가능성보다 노동자가 일하는 공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현장에서 일하다 경주에서 발생한 정도 규모의 지진으로 땅이 흔들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공장은 열려 있는 공간이다. 어디 숨을 곳이 없다. 그냥 뛰쳐나갈 수도 없다. 공장 곳곳에 유해위험물이 널려 있기 때문이다. 선불리 행동하다 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지진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없다.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매뉴얼은 더욱 없다. 우리 노동자들은 지진에 대한 교육도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우리 사업장에 어떤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중요한 일이다. 사업장마다 취급하는 유해위험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요령이 달라야 한다. 뜨거운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과 일반 조립 작업장의 위험이 다르다. 땅이 흔들렸을 때 뜨거운 물체를 취급하는 경우 화상과 부딪힘이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 조립 작업장의 경우 기계 오작동이나 부품으로 인한 협착 등의 사고가 날 수 있다. 용접, 절단을 자주 하는 작업장은 용기가 넘어지며 작업자를 덮칠 수 있고, 가스 누출로 최악의 경우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작업장의 위험 요인을 확인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파악한 후 이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스 용기 보관 방법과 결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뜨거운 물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주변의 위험요인을 어떻게 없앨지, 기계 가동 중 정전으로 인한 기계 오작동으로부터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후 작업장 통로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 작업자 통로와 지게차 통로를 확실히 구분하고, 작업장 물건을 너무 높게 쌓아 놓은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물건을 높게 쌓거나 단단히 고정하지 않으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물건의 낙하로 주위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다칠 수 있다. 작업장 출입구나 소화기 근처에 제품이 쌓여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출입문의 여는 방향이 작업장 안



순위	규모	발생 일자	위치
1	5.8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km
2	5.3	1980년 1월 8일	북한 평안북도 식주 남남서쪽 20km
3	5.2	2004년 5월 29일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74km 해역
3	5.2	1978년 9월 16일	경북 상주시 북서쪽 32km 지역
5	5.1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5	5.1	2014년 4월 1일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100km 해역

지진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사업주에게 노동자 보호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정부에게 사업장 점검을 요구하고 지진 시 대응 매뉴얼을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 보호가 사업주와 정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에서 바깥으로 열리는 구조인지, 비상벨이 정상 작동 하는지 등도 점검할 부분이다. 지진 대비 사전 안전조치는 상시로 회사에 점검을 요구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낸 큰 규모의 지진보다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현재 더 높은 분석임을 고려할 때 일상 안전 점검이 중요하다.

점검 후 지진 발생 대피 훈련을 해야 한다. 도쿄방재센터에서 발간한 지진대비행동매뉴얼에 따르면 대지진 체험자 중 갑자기 흔들려서 '비행기가 떨어졌다', '공장이 폭발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고, 특히 몸이 굳어지고 머리가 새하얗게 되어 적절한 판단이 어려워진다고 한다. 평상시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간접 경험을 통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즉각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진으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인명구조훈련도 해야 한다. 지진에 대해 막연한 공포를 갖지 말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보호하고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 사업주에게 요구해야 할 내용이다. 사업장을 지금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옆 공장에서 지진으로 인해 화학물질 누출이나 폭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공장에 이런 사고가 발생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지난 9월26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 없는 정부의 지진 대책, 사업장과 대중 이용시설에 대한 예방과점검 지침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하면 즉각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해야 한다. 지진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사업주에게 노동자 보호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정부에게 사업장 점검을 요구하고 지진 시 대응 매뉴얼을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 보호가 사업주와 정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희망버스’ 타고, ‘고용안정호’ 타고 해고 없는 세상으로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노동자대행진...노동조합으로 뭉쳐 대량해고 막는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 상시 임금체불, 고용불안에 대항하기 시작했다. 금속노조는 10월29일 경남 거제 아주공설운동장에서 '조선소 하청노동자 대량해고 저지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사전행사로, 10,29조선소하청노동자대행진을 본행사로 열었다.

10월29일 ‘희망버스’가 다시 시동을 걸었다. 서울, 대구, 광주, 청주, 아산, 창원, 울산, 광주에서 출발한 열 대의 희망버스가 거제로 향했다. 현대차울산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싸운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노동자, 민주노조 지키는 싸움을 하던 유성기업 노동자,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투쟁,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투쟁 등 싸우는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던 희망버스가 이번엔 무슨 사연 때문에 다시 출발했을까.

거제 아주공설운동장에서 훔날리는 알록달록 오색의 풍선 위에 적힌 글귀가 이날의 자리를 설명해 준다. ‘임금체불 없는 조선소, 고용이 안정된 일터. 불법 다단계 고용구조 물량팀 폐지. 노동조합 건설.’

조선소 원청의 선박수주량에 따라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난해와 올해 수만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됐고 내년까지 조선소에서 일하는 5~6만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의 위기에 놓여있다. 조선 원청이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정리해고, 희망퇴직을 종용하는 것도 모자라,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다단계 도급계약에, 업체폐업, 임금삭감,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하청 노동자들은

언제든 이유 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제, 통영, 고성의 조선소에서 일하는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용기를 내어 한자리에 모였다. 이 노동자들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희망버스에 실려 거제에 도착했다. 하청 노동자들은 직접 준비한 상황극으로 조선업의 위기, 조선하청노동자들의 상황을 알렸다. 이들은 노동조합으로 뭉뚱 뭉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결의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서는데 큰 용기가 필요했다. 세상 일에 중립을 지켰던 내가, ‘을’이라서 ‘갑’에게 아무 말도 못했던 내가, 반항 없는 노예로 길들여졌던 내가, 이제 변했다.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동무들과 어깨 걸고 싸우려 한다.” - 삼성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우리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곳에서 일해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 빼 빠지게 일해도 임금은 올라가지 않는다. 작업장에서 죽어도 어느 누구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조선 하청노동자는 소모품이 아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해 10만 하청노동자의 힘을 보여주자.” - 고성, 통영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뒤따랐다.

“오늘의 조선업 위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비인간적인 다단계 물량팀, 해괴망측한 경영이 낳은 결과다.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지할 것이다.” - 희망버스를 타고 온 목사

“정국이 하 수상하다.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대학 구조조정은 그 의미가 같다. 자본과 이윤의 논리에 맞서 조선업과 대학을 지켜야 한다. 대학생들도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 희망버스를 타고 온 대학생

집회 현장인 운동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배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나무박스로 배를 형상화 한 ‘고용안정호’에 수천 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다. 조선하청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4천6백여 명이 십시일반 모금을 해 만든 배였다. 조선하청 노동자 결의대회가 끝나고 ‘고용안정호’를 선두로 조선하청노동자,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대행진을 시작했다. 행진 대열은 대우조선 서문과 남문으로 향하며 임금체불, 업체폐업, 다단계 불법 노동착취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을 응원하고 노동조합 가입으로 노동자의 권리, 사람답게 일할 권리를 찾자고 외쳤다.

조선하청노동자 대량해고저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발족

앞서 지난 9월6일 ‘조선하청노동자 대량해고저지 시민사회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가 발족했다. 조선하청노동자 대량해고를 막고 고용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을 비롯해 시민, 사회, 노동, 종교단체까지 60여개의 단체가 발을 벗고 나섰다. 대책위는 발족 기자회견문에서 ‘원청 조선소들이 조선업이 호황일 때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지 않고 불법 다단계 하청노동자를 대거 사용했으며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조선산업의 위기를 정부와 회사가 책임지고 노동자 대량해고 등 위기의 책임을 하청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5만명이 넘는 하청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을 지키는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